세계청년대회와 공적 공간 사유화, 이대로 좋은가

특별기고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1년 뒤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WYD)'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985년 유엔(UN)이 정한 '세계 청년의 해'를 기점으로 교왕청이 주도하여 시작된 이 대회는 오늘날 천주교 최대의 국제 행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대회를 앞두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군가는 "종교 단체가 자발적으로 치르는 축제에 왜 다른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유난스럽게 반응하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종교 갈등의 차원을 넘어선다. 우리 공동체의 공적 자산과 역사가 어떻게 특정 종교의 전유물로 변질되고 있으며, 국가의 세금이 그 과정에 어떻게 투입되는가에 대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다.

권력자 흔적 남은 공공장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 속의 상징적인 장면 하나를 복기해보자. 청(淸)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건륭(乾隆)제가 머물며 마셨다는 샘물 곁에는 직접 쓴 '용정(龍井)'이라는 글씨가 비석에 새겨졌고, 그 권력자의 흔적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장소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전제군주시대에는 통치자의 발자취가 곧 역사의 정점이자 장소의 이름이 되었다.

우리 현대사에서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 최고 권력자의 호나 이름을 딴 표지석과 기념비가 공공장소 곳곳에 세워졌던 아픈 기억이 있다. 감리교 장로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휘호를 사찰 현판으로 걸어야 했던 일들이 그 증거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 시민사회로 진입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권력자나 집단의 사적인 흔적을 공공의 공간에 강요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역사의 진보이기 때문이다.

'성지' 된 해미읍성과 광화문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흔적 남기기'와 '공적 공간의 사유화'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 서산의 해미읍성이다. 해미읍성은 전남 순천 낙안읍성, 전북 고창 모양성과 더불어 조선시대 해안 지역의 국방과 행정을 책임졌던 소중한 민족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2014년 교왕이 방한하여 '아시아청년대회'를 집전한 이후 이곳의 위상이 갑자기 뒤집혔다. 천주교계는 이곳을 '해미국제성지'라 선포했고,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천주교가 요구하는 사업을 전폭 지원했다. 이제 해미읍성은 조선의 국방 역사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천주교의 순교 성지이자 아시아청년대회 개최지로만 각인되고 있다. 민족의 공공 역사가 특정 종교의 서사 아래 가려지고 사유화된 전형적인 사례다.

서울 광화문광장 역시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4년 교왕이 집전하는 시복식이 열렸던 곳이라고 새긴 대형 구리 표지판을 광장 바닥에 박아 놓았다. 수백 년간 이어온 우리 민족 역사의 중심지가 단 며칠간의 행사와 교왕 방문이라는 짧은 기록 때문에 특정 종교의 '성지'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올바른 역사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 행정의 최소 개입' 원칙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고 엄중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세계 어느 민주 국가가 특정 종교의 행사에 우리 정부처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 역대 세계청년대회 개최국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브라질 등 대부분 천주교가 국교와 다름없거나 인구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인 나라들이다. 주최 측이 2027년 서울 대회를 '비(非)기독교 국가 최초'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인 나라들조차 우리처럼 '특별법'까지 동원해 정부가 앞장서서 판을 깔아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잘 봐야 한다.

과거 호주 시드니나 미국 덴버, 독일 쾰른 등지에서 열린 대회 당시 해당 국가의 시민사회와 언론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범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감시했다. 정부의 역할은 오직 대규모 인파에 따른 교통안전과 응급의료 등 시민 전체의 안녕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국한되었을 뿐이다. 행사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주최 교구의 자부담과 참가자 등록비, 그리고 민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이다.

종교 행사에 범정부 기구 구성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종교적 정체성이 뚜렷한 행사의 운영비 자체를 국고로 지원받기 위해 '특별법'을 논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기구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기이한 광경이다. 이는 국제 기준에서 볼 때 '행정 지원'의 범주를 한참 벗어나, 국가가 특정 종교의 포교 활동에 직접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다.

더욱 기막힌 것은 우리 정치권의 대응 방식이다. 당초 국회에서는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으나, 종교 편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만 살짝 바꿔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대회 주최 측인 천주교회 역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세계 청년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라며 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면서도, 예산 지원을 받을 때는 "종교를 초월한 인류 평화와 청년의 축제"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본질을 가린 채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 우려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거나 불교를 비롯한 타 신앙을 지키고 있으며, 천주교 신자는 전체의 약 10% 남짓이다. 이런 다종교 국가에서 특정 종교의 행사를 마치 국가의 주요 사업인 양 둔갑시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 천주교 인구가 60%를 넘는 스페인이나 브라질과 비교해 볼 때, 10%의 남짓 되는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정부 지원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회 이후의 풍경이다. 해미읍성이 겪은 진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2027년 대회가 끝나면 서울의 광화문은 조선의 심장이 아니라 '교왕이 전 세계 청년들과 미사를 집전한 성지'로 기록될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 충청권의 수려한 산천 곳곳에는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지고 동판이 박힐 것이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순례 코스'를 조성하며 우리 국토의 공적 공간을 특정 종교의 영토로 편입시킬 것이다.

지금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종교 권력에 굴복하며 '적극 지원'이라는 달콤한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생색내는 그 '돈'은 정치인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높은 물가와 경기 불황 속에서 전 국민이 땀 흘려 벌어 낸 소중한 세금이다. 우리 세금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우고 특정 종교의 성지화를 돕는 데 쓰이는 이 거대한 모순을 우리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공정 · 상식 지키는 감시자 돼야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종교 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정당한 요구일 뿐이다. 천주교는 천주교답게 스스로의 힘과 신자들의 헌신으로 행사를 치러야 마땅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종교의 대변인 역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역사는 결코 어느 한 집단의 전유물이나 독점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27년 대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서슬 퍼런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이름으로 새어 나가는 세금을 철저히 감시하고, 성지화라는 명목으로 지워지는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는 길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미읍성 내에 조성된 성지화 조형물. 사진 제공=조계종

1면에서 이어짐

청년대회 지원 반발…"강력 대응" 예고

'정교분리 위배' 조례 문제 제기
서울시의회 "서울시 지원 진행"

특히 이날 종교편향특위는 '서울시의회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종교 편향적 지원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의회에 전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공교육 자원 활용은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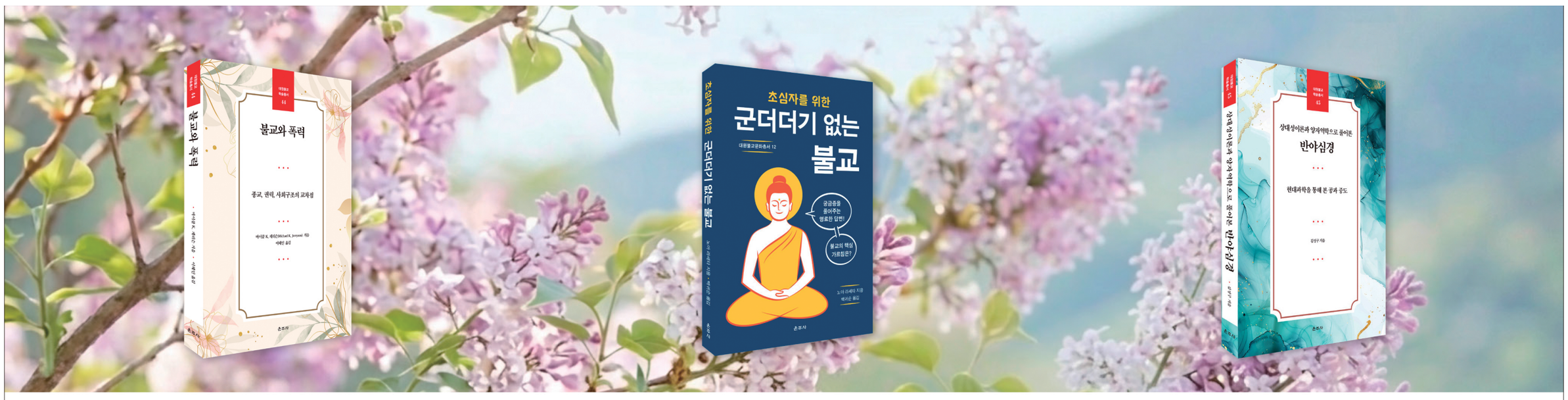
종교편향특위는 성명에서 "서울시의회가 국제 행사를 명분으로 특정 종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유린하는 몰지각한 처사"라며 △조례안 즉각 폐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즉각 해체 △공공정책의 공정성 복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행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시의회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문화·관광 행사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 제정과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안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시의회는 "행사에 국한된 한시적 조례안 대신 최근 공포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일반적인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청년대회의 주요 일정이 미사 등 종교의식으로 구성된 종교행사이고, 오는 6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제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종교편향특위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보화 스님을 비롯해 위원 탄보·상원 스님과 실천불교승가회 지도위원 일문 스님, 박광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정태윤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대표, 황경훈 우리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종교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최호정 의장과 김형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양경석 정책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김내영 기자



불교는 과연 비폭력의 종교인가?

불교와 폭력

불교가 역사적으로 전쟁과 고문,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어떻게 공생해 왔는지를 방대한 자료와 현장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정교한 학술적 시도!

마이클 K. 제리슨 지음, 이혜인 옮김/신국판/376쪽/값 24,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복잡한 교리 대신 명료한 설명과 실제적인 예시로 불교의 핵심을 안내하는, 불교를 처음 만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실천서!

노아 라셰타 지음, 백귀순 옮김/국판변형/184쪽/값 15,000원

현대과학을 통해 본 공과 중도!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통해 '공'과 '중도'라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반야심경』의 참뜻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김성구 지음/신국판/328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